

정부포상 업무지침 주요 변경사항

구 분	의 의	변 경 내 용	비 고
기본방침 신설	○ 새정부 국정과제와 철학을 반영하여 국정운영 뒷받침	○ 새정부 국정과제 및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 및 시대적 발전상황을 고려 - 관례적인 포상에 대한 점검을 하고, 미래 먹거리 분야와 그간 소외됐던 분야의 포상을 적극 발굴하도록 반영	P.13
일반국민 포상기회 확대	○ 추천제한 기준 완화로 일반국민 포상기회 확대	○ 1년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추천제한 경과규정 신설 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<u>5년의 경과규정</u> 신설	P.22
산업분야 정부포상 활성화	○ 산업분야 추천제한 기준 완화로 공적있는 기업인 등 포상기회 확대	○ 「공정거래법」 위반 관련 추천제한 기준 완화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·과징금 처분	P.24
단체표창 활성화	○ 행정기관의 적극적 업무 추진 장려	○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 관련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합리화 -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 미 적용	P.20
	○ 단체표창 취소 관련 추천제한 사항 내용 보완	○ 단체표창 취소 관련 문구 명확화	P.23 P.42
포상기준 예외대상 확대	○ 포상기준 예외대상 확대로 의인 포상기회 확대	○ 포상기준 예외 규정에 「의사상자법」에 따라 법률로 인정된 자외에 이에 준하는 의인 도 받을 수 있도록 추가	P.21
기타 포상제도 보완	○ 공무원 포상의 주요비위 관련 문구 명확화	○ ‘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’ 로 문구 수정	P.28
	○ 포상 후보자 추천 관련 문구 명확화	○ ‘ 행정안전부 조정권한 ’ 은 삭제하고 부적절한 후보자 추천 시 재추천 요청하도록 규정	p.75
	○ 관보게재의 책임성 확보	○ 추천기관의 정부포상 관보게재 의무 명확화	p.79
	○ 포상절차 명확화	○ ‘ 포상규모 협의 ’ 시 포상후보자 주요공적 제출 인원수 명문화(포상규모 1.5배수)	p.65
	○ 별지 서식 예시 개선	○ 정부포상 규모협의 요청 공문(예시) 본문내용 수정 - 별지 서식 특정인 성명 명시 삭제	p.109
	○ 일반원칙 보완	○ 정부시상의 경우 수공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을 명시 (재포상 금지에는 명시)	p.19
	○ 사전 확인으로 동일 후보자 중복추천 등 방지	○ 당해연도 다수 정부포상에 중복 추천 여부 확인 - ‘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’ 서식에 관련 내용 추가	P.69 P.92
	○ 정부포상 대국민 공개사항 관련 게재대상 현행화	○ 연간 포상계획,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자료 게시 홈페이지 변경 - ‘광화문1번가’를 ‘ ON국민소통 ’으로 변경	P.5 P.33 P.62 P.63 P.68